

# “부끄머니”? 지역화폐가 부끄러워?... 북구 ‘논란’

4월부터 6주간 전국 이름 공모 진행 7개 후보군 가운데 최종 명칭 선정 “북구 캐릭터 이용 홍보” 취지 불구 주민 “어감 이상하고 조롱대상 우려” 전문가 “부끄럽다” 연상되는 것 당연

광주광역시 북구가 오는 9월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1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지역화폐 명칭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다.

북구의 귀여운 마스코트 캐릭터인 ‘부끄’에 ‘머니’를 붙여 ‘부끄머니’라고 결정했는데, “지역화폐가 부끄러운 돈이나?” 라거나 “지역화폐를 쓸 때 부끄러워 하면서 쓰라는 것인가?”라는 트집잡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확대 해석 아니냐’던 지역 주민들도 “솔직히 부끄라는 단어에서 부끄럽다는 것이 연상되는 건 아니다”거나 “안 그래도 극우들이 광주나 지역화폐에 대해 무지성 비판을 하는데 그야말로 조롱거리를 던져 준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주간 전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이름 공모 절차를 거쳤다. 공모 결과 총 636건의 이름이 접수됐으며, 주민,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화폐 ‘부끄머니’ 디자인 가안.

광주 북구 제공

공직자, 구의원, 유관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투표, 설문조사 등 두 번의 온·오프라인 심사를 거쳐 고득점을 받은 7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이름은 ‘부끄머니’, ‘부끄페이’, ‘북구상생카드’, ‘북구페이’, ‘북구사랑화폐’, ‘북구드림페이’, ‘북구상생상품권’이다.

북구사랑상품권 TF 회의는 여러 후보군 가운데 북구 직원 및 구의원과 단체 관계자들의 심사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부끄머니’를 결정했다.

‘부끄머니’는 북구의 도시브랜드 캐릭터인 ‘부끄’와 ‘머니’를 더한 것으로, 선정

당시 지역화폐의 의미가 담겨 있고 주민들에게 쉽고 친숙하게 기억될 수 있는 명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이를 들은 시민들은 ‘친숙함’을 떠올리기 보다는 ‘부끄럽다’는 단어를 먼저 떠올렸고 곧바로 ‘지역화폐=부끄러운 화폐’가 연상이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북구 주민 윤모(29)씨는 “‘부끄머니’를 처음 들었을 때 당연하게도 ‘부끄럽다’는 단어가 먼저 머리에 떠올랐다”면서 “좋은 취지의 지역화폐인데 왜 이름을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을 하는 한광휘(34)씨도 “‘부

끄’라는 지역 캐릭터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 “지역의 상징을 활용한 배경을 알고 나서 공감은 했지만 어감이 확실히 이상하다”고 밝혔다.

정상진(51)씨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다”면서 “대선 끝나고 갈 곳 없는 극우들이 인터넷에 모여 광주를 트집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북구의 지역화폐가 그들의 먹잇감이 될 것 같아 좀 씁쓸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도 해당 비판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안현수 호남대 한국어학과 교수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지역화폐

를 발행한다면 명칭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예쁜 그릇에 보기 좋게 담겨야 손이 더가는 밥”이라며 “이번 명칭 선정에 북구 캐릭터의 의미를 담은 것과 별개로 ‘부끄’라는 어감에 ‘부끄럽다’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방안을 생각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북구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접하진 못했다”면서 “북구 상징 캐릭터인 ‘부끄’와 ‘부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화폐 카드 디자인에 캐릭터와 함께 설명을 넣을 예정이다. 홍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상 우익의 조롱이나 공격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답변이 없었다.

한편 현재까지 모집된 ‘부끄머니’ 가맹점 수는 6300여개이며 북구는 홍보단 운영을 비롯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지역화폐 발행 전까지 총 1만개 이상의 가맹점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집무실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 우원식,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

“불신·의혹 남지 않도록” 약속

우원식 국회의장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 “곧 시행되는 특별법에 유가족분들의 뜻이 잘 반영돼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국회가 잘 챙기겠다”고 17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갖고 “진행 중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쟁점 사항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알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 지원, 2차 피해 방지, 피해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언급하며 “다양한 지원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으로 이어지고, 유가족입장에서 불신과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국회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의 권영진 위원장, 이수진 간사 등도 참석했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승우 기자

## 광주 북구, 주거 취약계층 위한 ‘사회주택’ 조성 나서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업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목적

광주광역시 북구가 청년·노인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주택’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 사회주택 조성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부담 없는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북구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업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LH가 마련한 신축매입형 임대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북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 북구청에서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 북구형 사회주택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조성될 ‘북구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7년 말까지 3개소의 사

회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며 먼저 총 156세대 규모의 ‘청년 도약 주택’ 2개소를 용봉동 127-3번지(60세대)와 1372-1번지(96세대) 일대에 조성하고 추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어르신 돌봄 주택’ 1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이 눈에 띄는 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 중 하나로 거론되는 ‘신축매입임대 거점화’의 지자체-LH 협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축매입임대 거점화’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속에서 기존 주거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구축 및 제공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다.

‘북구 사회주택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지역의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신축매입임대 거점화 사업’의 취지와 결

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북구는 사회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어르신 돌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LH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사회주택 추가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력해 추진하게 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권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에 조성되는 첫 사회주택인 ‘청년 도약 주택 1호’는 오는 10월 준공될 예정이고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첫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도약 주택 입주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북구에서 보증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정승우 기자

## 이명노 시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개선 조례’ 통과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명노(사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234)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반영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이동식 간이침대 등 침대형 탑승설비 장착 △표준 휠체어 기준 탑승설비 규정 확대 △침대형 탑승설비 장착 의무를 명문화 등이다.

현재 광주시는 외상 근육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심 구급차 이용료 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상 특별교통



수단에 침대형 탑승설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제 차량 도입 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안정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이명노 의원은 “앓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은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교통약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Advertisement for Jnilbo Instagram, including the logo, handle @jnilbo, and QR code.